

#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6월 29일(금)

18th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 고용불안 조장하는 강제명퇴

또다시 은폐에 급급한다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명예퇴직 강요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기관장들이 퇴직을 강요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거리 발령 등 인사이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대토론회에서도 노동조합은 사측의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사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은근슬쩍 되살아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사측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사회공헌에 수백억 지출하면서 직원에는 퇴직을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

명예퇴직 강요는 조합원의 유무를 떠나서 전체 KT조직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특히 3급 비보직에 대한 무차별적인 퇴직강요는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보직에 대한 퇴직 강요는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조합원의 퇴직도 당연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IT서포터즈 등 사회공헌활동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아끼지 않

으면서 정작 직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기관장들을 승진시켜 주고 있다. 특히 임의로 휴직까지 부여하는 행위는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사장의 지시 또는 용인이 없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정황으로 불태 분명 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확신할 수 밖에 없다.

**고용불안 조장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수년동안 노동조합은 오직 고용안정을 위해 최소한 임금인상 또는 동결을 감당해 왔다. 2003년 명예퇴직 이후 가장 먼저 고용안정 선언을 사측에 요구한 것도 바로 현장에 만연한 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측이 퇴직강요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몇명의 퇴직자를 만들기 위해 그보다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다른 직원의 고용까지 불안하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사측의 저의가 사뭇 궁금하다. 지난 노사토론회에서 사측도 인정했듯이 현장은 신규채용을 서둘러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퇴직을 강요

하는 것에는 그 이면에 불온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뿐인 재발방지 약속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가시적 조치를 보여라!**

명예퇴직 강요가 재발되는 것은 명확한 처벌과 책임추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측이 겉으로는 본질경영을 강조하면서 뒤에서 불법 편법을 눈감아주거나 부추기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측의 문서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노사토론회에서 밝힌 사측의 강제명퇴 근절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해당 기관장 엄중문책 등 가시적인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이번에도 은근슬쩍 덮어두려고 한다면 고소고발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KT노동조합

## 민주노총 총력투쟁 전개

한미FTA 저지 필수유지업무저지 등 13개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이 6-7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당면한 노동·사회현안들이 총체적 위기수준으로 치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미FTA체결저지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 ▲비정규직 시행령과 차별시정 안내서폐기 및 비정규직 전면재개정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저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 ▲산재법 개정저지 및 개혁쟁취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국민연금법 개정저지 ▲의료법 개정 저지 ▲교수노조 합법화 ▲산별법제화 법 개정 등 13가지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29일 '6월 총력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6월 한 달간 집중된 13가지 투쟁요구에 대해 총화하고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대규모 집회와 위력적 가두행진을 전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들

이 집결한 자리에서 비정규 확산 및 시행령 전면 무효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선포하는 한편 한미FTA 체결저지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결집한 한미FTA 저지 총결기로 이어나갔다.

한편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에 적극 결합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왜곡 과장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부강경대응방향이 내리진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권력과 자본·언론의 총파업 흔들기에 맞서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는 "한미FTA가 미국식 제도, 관행을 한국사회에 이식시켜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속노조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금속노조 상황과 관련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미FTA 반대투쟁에 떨쳐나선 것은 '올바른 노동운동'과 '사이버 노동운동'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노동자들과 의로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이 국민 삶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임을 분명히 하며 조직력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IT연맹이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 건설연맹은 다우크레인 파업투쟁에 주력하는 한편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광역시도 당 항의투쟁을 지역별로 매일 전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22-23일 철도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였고, 26-27일 최임위 집중투쟁에 이어 29일 연금법 및 통합징수법저지 파업결의 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결집했다.

공무원노조는 23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을 벌이고, 25-29일 해부투 단식농성에 결



합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결집력을 보여줄 다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지역별 파업집회에 이어 29일 6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간부 대의원 총파업(상경투쟁)으로 시작해 25-26·28-29일 상경

투쟁, 27일 지역별 투쟁에 이어 7월2-3일 전면 총파업(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는 사립법개약저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29일 사학법·교원평가·연금법·교원노조법 등 4대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북지방본부  
무인 분기국사 환경정비 실시  
경기 북부권 17개소  
분기국사 대청소



강북지방본부 김태호위원장 및 상집 간부들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기 북부권(고양, 의정부, 구리지사)과 인접한 서울권(신촌, 강북, 광진지사)내 소속 지부장들과 함께 무인분기국사 환경정비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했다.

28일 첫날 고양지사 문산지점내 장현 및 적성분기국사를 시작으로 오전내 비가 내린 둘째날 의정부지사내 녹양, 송추무인국사 마지막 30일 구리지사 남양주지점 마석, 퇴계원지점 진접분기국사 등 총 17개소를 이동하며 부족한 인원사정과 빠른 업무수행으로 바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국사내,외를 말끔하게 정리했으며, 특히 경기권에 인접한 서울권 지부장들도 참여했다.

현재 강북본부내에 149개의 분기국사가 존재하며 매년 봄기를 2차례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 강제명퇴 신고센터 운영 및 전담반 편성

노동조합은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명퇴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사측에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명예퇴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강제명퇴 및 고충처리 신고센터, 및 전담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홍보 바랍니다.



**강제명퇴 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ttu.or.kr/>

위치 → 화면우측 / Quick Menu / 강제명퇴 및 고충처리 신고센터

방식 → 기본적으로 실명은 비공개. 고충처리 접수시 "비공개"를 선택하면 작성한 본인만 확인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위원장에게 e-메일로 직접 전달됨.

※ 로그인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편집2국(031-727-4836/4838)으로 문의하십시오.

**회원가입 방법 예시**

만일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회원가입 신청을 먼저 한다.

**전담반 구성**

팀장 : 수석부위원장(김해관)

팀원 : 정책1국장(장인태), 복지국장(한호섭), 산업안전국장(김희석)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통·인터넷 감청 허용

## 시민단체 “모든 국민 잠재범죄자 취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통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통법 개정안대로라면, 정보·수사기관은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또 기

존 통신망은 물론 앞으로 구축되는 것도 모두 감청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들은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통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휴대전화는 2010년, 인터넷은 2012년부터 감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통법 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나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은 통화 내역 자료에 이동통신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집어 넣고, 감청 대상 범위에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까지 포함시켰다.

민변과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 법사위가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뒤통수 때기나 휴대전화 감청 2010년부터, 인터넷 2012년부터 가능**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통신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에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한다. 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이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말한다. 통법 개정안은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기존 통신망을 모두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바꾸고, 앞으로 새로 가는 통신망도 감청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이 때문에 통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전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으로 남기는 악법”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통법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먼저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이 가능해진다.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컴퓨터)에 감청장비를 달아, 정보·수사기관들이 이용자 몰래 통신 내용을 엿듣거나 엿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4세대 이동통신 등 앞으로 새로 갈라지는 통신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휴대전화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버스크드 이용내역도 요청하면 제출해야**

휴대전화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은 4년 이내에 감청장비 설치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정하면, 휴대전화는 2010년부터 감청이 가능해진다.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쪽지(메신저) 내용을 중간에 몰래 가로채 엿보는 인터넷 감청은 2012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통신사실 확인자료)도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은 필요할 때마다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통화 내역에는 이용자 위치정보도 포

함된다. 이를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협조나 이용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진다. ‘전기통신사업자’로 돼 있던 것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고쳤다. 신용카드·버스크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이용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청 대상에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범죄도 추가됐다.

그동안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갈수록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에 위탁해 감청을 하도록 한 만큼 남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영경 정책실장은 “통신·인터넷 업체가 외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통신비밀이 국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통신비밀 보호법이 거꾸로 ‘통신비밀침해법’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FTA ‘번개협상’, 진짜 끝났나

## 아직 변수 남아...FTA 협정문 추후 개정도 가능



한미 양국 정부가 29일(한국시간) 새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지었다. 이번 협상은 '번개처럼 진행돼, 자국의 정치지형 변화를 반영한 이른바 '신통상정책'을 토대로 미국 측이 추가 협상을 공식 요구한 지 2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추가 협상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일단 협정은 양국 행정부의 손을 떠나 의회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추가협상 서둘러 종료...미국 의회 고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환경조항의 강화와 미국 제약자본의 이해를 강하게 대변해온 의약 관련 조항을 손질한 이른바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것이 지난 5월 11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6월 16일에야 한국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내밀었다.

신통상정책의 중심인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7가지 다자간 환경협약의 준수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두 달 전 합의했던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를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이나 보상금 징수가 가능한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었다.

4월 2일 협상 타결 발표 뒤 두 달만에 다시 서울을 찾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30일 서명식에 올릴 협정문에 추가협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 시간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역제안을 고려하겠다”며 걸음로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은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지각제안'을 덤서 받게 되면 비준준도라는 정치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반면 협상을 조기에 끝내지 못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후 협상에는 미국 헌법상 통상협상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협상 내용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협정의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FTA 청문회에서 “이것저것 제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판도라의 박스가 열리게 된다’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언급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주재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FTA 추가 협상 마무리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의 TPA 시한 만료 후 추가 협의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했다”고 자평해 이 문제가 중요한 고려요인이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미 의회가 주도한 '신통상정책'이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 비준은 사실상 어려운 전방”이라고 밝혀 이번 추가 협상의 조기 마무리가 본협상 후 반부터 풀림없이 제기됐던 이른바 ‘미국 민주당 변수’, 즉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 아직 변수 남아...FTA 협정문 추후 개정도 가능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 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분쟁절차가 앞서 정부간 협의를 하도록 하고 노동 및 환경제도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 요건을 강화해 남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우리측 역제안의 핵심 요구인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의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모든 변수가 없어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우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댓가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에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받았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미 의회의 소관이다.

협상과정에서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 그쳤던 미 무역대표부(USTR)가 추후 한국 정부와 미 의회간 협상에서 “호주(판개)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우리측 요구를 관철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막았다’고 자평하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웬디 커틀러 자국협상대표의 말을 근거로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 인정을 논의할 시점이 되면 또다시 협상거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추가협상이 마무리됐지만 FTA 자체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발효 후에도 한미FTA 협정문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의 근거는 한미 FTA 협정문 22차(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24차(최종규정) 등에 담겨있다.

# 금나라씨, 마동포 고발하세요!

## 민주노동당, 대부업법 위반·탈세·신체포기각서 강요로 민·형사상 처벌 가능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는 아버지의 신체포기각서를 확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의 비자금에 추적한다. 금나라가 아버지의 원수인 마동포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금나라의 옛 애인 이차연(김정화 분)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까?

결론적으로 마동포는 연66%가 넘는 고리대대출로 대부업법 위반, 가액의 비자금 은닉에서 추적할 수 있는 탈세, 신체포기각서 수령에 관한 형사범죄 등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자상환 위반, 탈세, 불법추심은 현실에서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사태이기도 하다. 이차연 역시 대부업체 광고전단을 뿌리면서 대부업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대부시장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판친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명함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도 불법·편법·미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120% 폭리 부과하는 마동포는 불법사채업자의 전형**

사채업자 마동포의 대부리트를 보면 6000만원 대출에 연120%의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연70~120%로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 규정을 위반했다. 연체이자자는 연180%나 된다. 연체 여부를 불문하고 연66% 이상의 금리 부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다.

**▶금나라는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

마동포는 금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수취한데다가 비자금까지 은닉하고 있으니 합법적인 세금 신고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 금나라는 탈세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입장에서 상당히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다.

**▶마동포는 무일푼 될 수도**

드라마에서 마동포는 폭행, 육설, 채무자의 관계인에 채무사실 고지 및 직장 방문은 물론 신체포기각서 수령 같은 반사회적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경우 형사상의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금리제한 규정을 뛰어넘는 고리대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결국 마동포는 처벌은 둘째 치고라도, 세무조사와 소송과정에서 변변한 재산마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 ▶이자연씨, 대부광고 규정 지키세요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이 마동포의 고객을 끌어 모으면서 돌린 명함형 대부광고지 역시 불법 투쟁이다. 대부업법상 광고의 필수 기재사항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업체 등록번호 및 등록 시·도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정부의 단속은 형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싼 이자 믿고 돈 빌리면 평생 대부시장 못 벗어나

이자연의 대출금리가 연18%에 불과한 것은 특수한 목적(마동포와 경쟁) 때문이지만, 현실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무이자’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우량고객이 무이자만 믿고 돈을 빌리다가는 평생 대부시장에서 헤어날 수 없다. 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조회하지마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곧 무박질치고, 은행권은 물론 제금융권도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 ▶돈 때문이 아니라 정부·제도가 문제

독고철 노인(신구 분)은 금나라에게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마동포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법 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정부가 1998년 이자제한법을 없애고, 그 뒤에 대부업법 제정으로 연66%의 폭리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대부시장은 폭증세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무수히 늘어났다.

결국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금리를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응징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를 활성화하고, 공적금융·대안금융을 확충해야 현실에서 급증하는 ‘쩐의 전쟁’의 피해자는 줄어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53-4)과 금리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실(<http://minsang.kdip.org>)도 운영 중이다.

# IPTV사업 본체에서 시행해야 한다

자회사 분리는 요금부담·투자부담·고용불안 등의 문제로 사업활성화를 저해할 것

IPTV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홍창선(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의원)에 이어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IPTV 관련 법안을 발의 한 것이다. 홍창선의원이 발의한 '광대역통합 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사업법'은 한시적 특별법 형태로 IPTV에만 적용된다. 이법안은 사업권역을 전국면허로 하되 시장점유율을 국내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봉숙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안은 지역면허체계를 고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현행 SO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시장점유율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 의원은 의원 31명을 대표해 IPTV 관련법으로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IPTV 사업권역을 전국으로 하되, 시장 점유율은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는 자본 49%로 한정했다.



## 국회에서 발의 또는 발의 예정인 법안 비교

구분	방송법 일부 개정안(손봉숙 의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사업법안(홍창선의원)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서상기 의원 1안)
법안형태	방송법 일부 개정안	한시적 특별법 형태	한시적 특별법 형태
사업 분류	*지상파 방송사업: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지상파IP포함) *유선방송사업: 유선IPTV포함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IPTV방송사업(유무선포함, VOD는 제외)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사업(유무선포함, VOD는 제외) *디지털미디어서비스콘텐츠사업
면허 방식	*방송위 추천+정통부 장관 허가	*IPTV 방송사업: 방송통신위 허가 *콘텐츠 공급사업: 방송통신위에 신고	*디지털미디어전송사업: 방송위 추천+정통부 장관 허가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사업: 방송위 등록(보도, 종합편성 제외) 뉴스통신의 보도전문: 방송위 승인
사업 권역	*방송위 고시, 지역사업권 부여	*전국이 원칙 허가신청인의 신청이 있고 방송통신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허가 가능	*방송위 지역사업권 부여 및 고시, 2012년 전국면허
소유 제한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유선방송사업 100분의 33 초과 소유 금지	*일간신문, 뉴스통신: 100분의 49 초과 소유 금지	*일간신문, 뉴스통신: 전송사업의 100분의 49 초과 금지
진입 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방송법 기준-지상파 유선 위성: 경영제한 -위성은 유선방송사업 자본 33% 초과소유 금지-지상파, 유선방송사업 경영금지 -SO와 동일한 시장점유율 규제(전체 SO가입자의 1/3)	*IPTV 방송사업자: TV, 라디오, 데이터 PP별로 사업자수 5분의 1 초과 경영 금지 *IPTV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포함 국내 총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 *타 방송사업과 경영제한 없음	*관련 규정 없음
외국 자본	*방송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네트워크 및 콘텐츠 등등 접근	*지배적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제공 의무화 *동시제출신은 KBS1, EBS	*필수 전기통신설비 접근 요청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못함 *KBS, EBS방송통신위가 지정 고시하는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전송사업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체결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음(비의무사항)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권 명시(KBS1, EBS) *이용요금 방송위 승인, 이용약관 방송위 신고
이용 약관	*이용요금 방송위 승인, 이용약관 방송위 신고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이용요금 방송위 승인, 이용약관 방송위 신고
관할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이처럼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활발하지만 입찰자가 커 의견을 조율하는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사업시행에서 있어서 방송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 진입이 될 경우 통신산업 고용의 문제까지 흔들릴 수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IPTV사업에 대해 조합간부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먼저 자회사 설립을 통한 IPTV사업 진출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자회사 설립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별도의 비용은 결국 소비자 즉 국민의 이용료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조합원들의 고용이 흔들리게 된다. 현재 통신산업은 포화상태로 인해 서로 물고 물리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비용만 증가할 뿐 새로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 분리까지 이뤄진다면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셋째, IPTV는 네트워크 품질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만큼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모된다.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자는 국내에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자회사 설립으로만 사업진출을 강제한다면 단기적 이익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아래는 IPTV사업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 IPTV 본체 시행

### 자회사 분리 시 국민(소비자)의 비용부담 확대

-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증가로 시청자 부담 가중

### 자회사 분리 시 통신기업 구조조정 가능성 커

- 통신산업의 오랫동안 성장정체의 위기상황에 닥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IPTV마저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자회사 분리 시 투자부담으로 인한 IPTV 활성화 저해

-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사업자인 TU의 경우 지분제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된 선례

가 있음.

- IPTV는 각종 결합서비스와 연결될 때 그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음. TPS, QPS 등

### 규제 혁명의 문턱

- 대기업의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KT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규제의 혁명에 어긋남.

- KT의 여론 지배력은 과장된 우려: 오히려 신문 등 타 매체의 방송진출로 인한 여론 장악력이 더 확대될 수 있음

### 서비스 전국 면허 필요

### 전국면허를 추진하되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방지를 위한 점유율제한이 효과적임.

- 점유율 제한은 한 지역내 점유율 상한을 둬으로써 여론 독점을 방지하고 크림스키밍도 방지할 수 있음.

- 지역면허는 향후 전국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지역면허는 지역내 차별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며 오히려 사업자간 담합이 우려됨.

- 지역면허는 현 케이블 사업자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국민(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결과 초래.

- 문화관광부 소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송소유 규제는 거시적인 큰 틀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세분화된 시장을 설정해 놓고 그 시장마다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미디어간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상황만 고려하는 단계는 넘어선 상황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미디어 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함에 따라 개별 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이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수용자의 관점에서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시청자 점유모형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행중이다"고 밝히고 있다.

### 1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

통신사업자들이 대도시 등 고수익-저비용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그의 미가확대된 지금은 통신뿐 아니라 의료보험,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 2008년 최저임금 인상률 8.4% 확정

27일 새벽 2시 협상 완료...노동자들 노숙투쟁 진행해



2008년도 최저임금이 27일 새벽 2시 8.35%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시급은 07년도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인상됐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이용식 사무총장은 최종교섭 결과보고회에서 "열심히 투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역량이 부족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점에 죄송을 말씀드립니다."고 타결된 8.35% 인상을 죄송스러웠다.

이후 이어진 결과보고에 따르면 저녁 8시경, 공익위원들이 5.3~11.2%까지의 범위 안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이에 노동계 교섭위원들은 총괄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상황에서 교섭을 계속할 경우 6%를 넘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교섭 테이블에서 철수했다.

이후 중립 회의를 통해 마지노선을 8.2%로 결정, 10시부터 재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공익위 중재아래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긴밀한 논의 끝에 8.35%로 최종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 하지만 밤 12시 7.2%를 낸 사측은 두 시간 동안 이 인상안을 유보, 최종적으로 공익위가 8.35%를 가지고 투표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9명중 2명은 절대반대, 7명은 노동계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고 합의 형태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최임시스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노사정 구조를 없애고 정부 부처장관들이 최임을 결정하자는 안을 개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협상에서 경총 임금가이드라인인 2.4%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측의 압박으로 4%수정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노측에서는 이 협상은 당초 제시한 50%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렇게 경총과 노조간의 치열한 대립과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여러 대립들이 있었다.

3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예상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체되었다.

공익위원회에서 중재안으로 5.7%를 제시할 것을 노측에서 미리 알고 이를 저지하면서 논쟁이 오갔기 때문이다. 또한 비공개

로 진행되는 전원회의를 참관하겠다는 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실랑이로 인해 늦어졌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1시간을 넘게 소비한 것이다.

또한 오후 8시경 최저임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

총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정문을 뜯어내고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경찰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물대포로 대응했다. 결국 30분 가까운 서로간의 대치가 있었으나 별 부상자 없이 충돌은 마무리되었다.

## 최저임금 왜 중요한가

### 간접고용 줄이고 직접고용 확대 계기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수준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최저임금 하면 KT조합원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정규직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 기업들이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파견, 용역, 다단계 하청, 소사장제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간접고용이 오히려 직접고용에 비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주지 시킬 때 정규직의 확대와

고용안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저지 사이버 투쟁

# 새로운 투쟁으로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일조

노동조합과 IT연맹은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사이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사이버 투쟁의 날인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사이버 투쟁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과 청와대 자유 게시판(<http://www.president.go.kr>)에 많은 조합 간부들이 글을 올리며 한미FTA체결 저지의 열기를 확산시켰다

이후 2차 투쟁시간인 14~15시 사이에도 IT연맹에서 올린 글에 대하여 추천 및 댓글달기 투쟁을 전개했으나 다음측에서 일방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글을 삭제했다.

이번 사이버투쟁은 네티즌과 직접 만나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사이버 투쟁은 기존 오프라인 투쟁을 넘어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투쟁방식으로 한미FTA 체결 저지에 일조할 것이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한미FTA 관련 예시글 및 댓글을 무단 삭제하여 사회적 파장이 되고 있다.

연맹은 지난 6월 18일(월)부터 이틀간에 걸친 한미FTA 체결 저지 사이버 투쟁을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 진행했다. 연맹 투쟁단이 본격적으로

조직되어 전개된 사이버 투쟁은 6월 18일(월) 오후 2시 35분경 다음 측의 일방적인 무단 삭제로 중단됐다. 이에 연맹은 다음 측에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삭제글 모두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다음은 내부 지침 운운하며 복구시킬 수 없다는 점만을 되풀이했다. 여론 항배를 좌우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공공성 또한 주문하였으나, 이마저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었다.

연맹은 이와 관련 항의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포털 사이트의 공공성을 내딛진 다음 의 실태를 알렸으며, 주요 언론들은 관심을 갖고 상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 현장직원 본사방문

“많은 조합원과 가족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달라”

제3차 현장직원 본사방문 1일 체험이 6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첫날 서울 도착하여 유명 호텔에서 투숙 후 자율 체험 시간을 갖고 둘째 날 본사로 이동하여 KBN 스튜디오 방문, 본사 8층 영업본부, 고객센터본부 등 유관부서를 견학하고 광화문으로 이동 KT아트홀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남방건설국센타 김문상 조합원은 지방에 있어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방문해보니 KT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가족에게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부본부 강남NSC 이영호 조합원의 가족도 진행 요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두가 한가족처럼 느껴졌고 남편 회사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가한 대다수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이러한 행사 기회를 늘려 좀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노사협의의 통해 평소 본사 방문이 쉽지 않은 현장 조합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IT연맹대의원대회...규약개정 통해 위원장 사무처장 체제로

IT연맹은 21일 오후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개최 하여 현실에 맞는 규약개정 및 규정 제정등을 단행하였다.

대의원 58명 중 51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대의원대회는 규약개정 전담반이 작성하고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규약 개정 관련 건'을 상정해 현행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체계를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변경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처무 규정,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회계 규정과 보수 규정이 제정을 하였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으로 KTF박재범 국장이 위촉되었다.



## 온가족이 함께 떠나는 계곡 바캉스

BEST 7



### Best-1 법수치계곡

백두대간의 옥계수가 모이는 곳

양양 남대천의 상류인 어성천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굽이지는 비경의 계곡. 백두대간의 첩첩산 중단을 뚫고 돌아 물이 맑고 차다. 하류인 어성천 쪽으로는 넓은 시냇물을 이루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좋다. 찾길이 끊어진 곳에서 백두대간 준봉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상류 쪽은 심산유곡 그 자체로 숲한 지류가 가치를 치면서 이름조차 없는 비경의 골짜기와 폭포수가 즐비하다. 상류 쪽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숙박을 원할 경우 야영 장비 일체를 준비해 가야 한다.

문의 : 033-670-2351 (양양군청 관광문화과)

### Best-2 불영계곡

국내 계곡의 고전

구비마다 절경이 널려 있고 깊이 또한 가능하기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엄한 계곡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주변에는 신라의 고찰 불영사를 비롯하여 성류굴, 민물고기전시관, 망양정 등 볼거리도 풍성하여 여름철 가족 피서지로 많은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수량이 풍부하고 나무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야영을 하며 물놀이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문의 : 054-785-6393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 Best-3 아침가리골

사람의 손때 묻지 않은 심산유곡

구룡령봉 기슭에서 20km를 흘러 방태천으로 흐르는 오지 계곡. 조정동계곡이라고도 불린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아 열목어, 수달 등의 희귀 동물이 서식할 정도로 원시림을 간직하고 있다.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접근이 힘들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캠핑 장비와 먹을거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불편함이 없다.

문의 : 033-461-2122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Best-4 응주계곡

문경이 자랑하는 천혜의 계곡

소백산맥 오지 깊숙이 숨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대야산 자락의 계곡. 울창한 수림 사이에서 사시사철 옥계수가 흐르는 청정 지역이다. 문경팔경 중 하나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의 경계를 이루는 계곡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계곡 내에 있는 응주폭포는 암수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해마다 많은 피서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응주폭포 상류 쪽에는 넓은 암반 지대가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 054-550-6060 (문경시청 문화관광과)

### Best-5 덕풍계곡

산천어와 버들치 가득한 삼척의 오지

응봉산(999m) 북서쪽 아래 풍곡마을 입구에서 덕풍마을에 이르는 길이 6km의 오지 계곡이다. 버들치와 산천어, 통사리, 연준모치, 민물참깨 등이 서식하여 계곡 전체가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다. 계곡 양쪽으로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노송이 장관이다. 특히 이곳의 노송은 조선시대에 경복궁 대들보로 사용할 만큼 곧고 커서 자리를 펴고 놀기에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계곡의 상류 쪽으로 제3폭포에 이르는 12km 구간은 내금강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치가 빼어나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다. 워낙 물이 차서 한여름에도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기가 힘들며 산천어가 많아 낚시하기에 좋다.

문의 : 033-570-3607 (삼척시청 기획관리사무소)

### Best-6 백두동계곡

지리산의 원시림을 그대로

지리산의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유난히 폭포가 많고 주변이 깨끗한 계곡으로 유명하다. 험준하면서도 수려한 계곡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싱그러움과 녹음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줄기 덕분에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백두동마을에서 가네소 폭포까지는 수심이 얇고 흐름이 완만하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에 좋고 그 위쪽 구간은 등산을 하기에 좋다.

문의 : 065-962-5354 (지리산 동부관리사무소)

### Best-7 장전계곡

평창과 정선의 청정 교차로

오대천으로 흘러드는 여러 계곡 중 막동계곡과 더불어 경치가 뛰어난 평가를 받는 계곡이다. 다른 오염원이 없어 물빛이 맑고 계곡의 암반 풍치가 좋다. 특히 기암괴석과 짙은 숲이 파노라마를 이루며 비경을 빛고 있는 주변 경치가 일품이다. 작은 폭포와 바위틈에 긴 초목이기는 때묻지 않은 원시성을 고스란히 품어 사진작가들이 선호하는 대표 촬영지로 꼽힌다.

문의 : 033-330-2399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2007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0일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

**운영기간** 2007.07.20 (금) ~ 08.19 (일) [30박 31일]

**운영시설** 18개소 453실/일

- 콘도(61.8%), 펜션(21.1%), 호텔/리조트(12.1%), 모텔(5.0%)

**운영기관** 2개 기관

**이용기준** 2박3일 (제주 3박4일)

**객실배정** 기관별 현원기준 배정

**선정기준** 현 수련관 이용자 선정기준에 준함

### 2007년도 하계휴양소 안내

기관명	휴양소명	종류	지역	평형	객실구조	입소인원(기본·최대)	홈페이지
강북본부	동해콘도	콘도	속초	25	방1,거실1	5명-7명	<a href="http://www.donghaecondo.co.kr/">http://www.donghaecondo.co.kr/</a>
	무이밸리펜션	펜션	평창	18	방1	4명-6명	<a href="http://www.familialodge.com/network/muivalley/muivalley0.asp">http://www.familialodge.com/network/muivalley/muivalley0.asp</a>
강남본부	니코미코	펜션	평창	21	침실1,거실1	4명-6명	<a href="http://www.nikomiko.co.kr">www.nikomiko.co.kr</a>
	대명비발디	콘도	홍천	19	방1,거실1	4명-5명	<a href="http://www.vivaldipark.com/">http://www.vivaldipark.com/</a>
서부본부		콘도	홍천	26	방2,거실1	5명-6명	
	부산본부	글로리콘도	콘도	해운대	18	방1,거실1	4명-6명
전남본부	남송가족관광호텔	콘도	남해	11	방1	4명-6명	<a href="http://www.namsongresort.co.kr">www.namsongresort.co.kr</a>
	금호콘도	콘도	화순	17	방1,거실1	4명-8명	<a href="http://www.hwasun.jeonnam.kr">www.hwasun.jeonnam.kr</a>
대구본부	다비치콘도	콘도	보성	17	방1,거실1	4명-5명	<a href="http://www.dabeach.co.kr">http://www.dabeach.co.kr</a>
	연산온천파크텔	호텔	포항	12	방1	5명-7명	<a href="http://www.yeonsanspa.com/">http://www.yeonsanspa.com/</a>
충남본부		호텔	포항	8	방1	3명-4명	<a href="http://www.yeonsanspa.com/">http://www.yeonsanspa.com/</a>
	해바리기모텔	모텔	문경	7/10	방1	4명-6명	
전북본부	환상의바다펜션	펜션	대천	11	방1	4명-5명	<a href="http://www.oceanoffantasy.com">http://www.oceanoffantasy.com</a>
	중앙하이츠	콘도	남원	26	방2,거실1	5명-10명	<a href="http://www.heightscondo.co.kr/">http://www.heightscondo.co.kr/</a>
강원본부		콘도	남원	18	방1	4명-6명	<a href="http://www.heightscondo.co.kr/">http://www.heightscondo.co.kr/</a>
	설악 l park 콘도	콘도	속초	20	방1,거실1	5명-7명	<a href="http://www.hdsorakcondo.co.kr/">http://www.hdsorakcondo.co.kr/</a>
충북본부	청풍리조트	호텔	제천	10	방1	4명-5명	<a href="http://www.cheongpungresort.co.kr/app/main.php">http://www.cheongpungresort.co.kr/app/main.php</a>
	협재콘도	콘도	한림	25	방1,거실1	5명-7명	<a href="http://hj.clickjeju.net/">http://hj.clickjeju.net/</a>
제주본부	토비스콘도	콘도	애월	25	방2,거실1	6명-8명	<a href="http://www.etovice.com">www.etovice.com</a>
	그랜드호텔	호텔	연동	10	방1	3명-5명	<a href="http://www.grand.co.kr">www.grand.co.kr</a>
네트워크부문	강원랜드 하이원마운틴콘도	콘도	정선	21	방2,거실	5명-7명	<a href="http://www.high1.co.kr">http://www.high1.co.kr</a>

홈페이지의 내용은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